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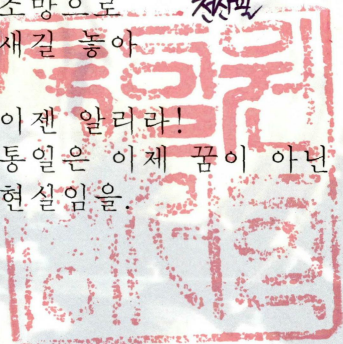
## 통일을 꿈꾸며...

잡초에 묶인 발길  
녹슬은 철마

성한데 한 곳 없는  
상처투성이의  
허망한 세월

염원으로  
아픔을 씻고  
소망으로 <sup>전사</sup>  
새길 놓아

이젠 알리라!  
통일은 이제 꿈이 아닌  
현실임을.





# 차례

1

## 어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 7

- 현실로 다가온 통일
-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일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국가

2

##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 10

- 우리 통일정책의 일관성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상
- 북한의 통일전략

3

##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19

-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
- 오늘의 북한
- 대남정책의 이중성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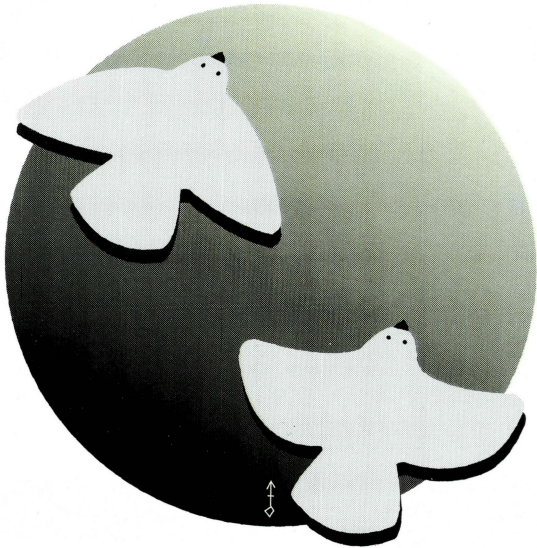
## 통일환경은 어떠한가 / 25

- 화해·협력의 새시대
-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
- 주변 4국의 한반도 정책

5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29

- 통일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민족적 합의
- 통일은 나의 일



## 1. 어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 현실로 다가온 통일

통일은 광복 이후 반세기에 걸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여망(興望)이자, 반드시 이룩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며 지상과제이다. 그럼에도 동서냉전체제 아래 남북간의 대결과 불신속에 살아온 우리에게 통일은 한낱 먼 장래의 ‘꿈’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을 비롯한 동구공산권의 몰락 등 이른바 ‘세기적인 대변혁’으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을 이룸으로써 한반도의 통일도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었다.

더욱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특히 절대 권력의 상징이던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내부여건의 변화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통일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개연성(蓋然性)을 높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나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민족정기와 통일외지의 상징 '백두산 천지'

##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일

통일이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통일을 성취해야 하는 까닭은 한마디로 분단으로 인해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과 비극, 희생과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보다 밝은 것으로 창조(創造)해 나가려는 데 있다.

분단 때문에 치루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희생과 고통은 6·25 동족상잔의 참화(慘禍)는 그만두고라도 자유와 인권의 제약, 민족자존의 손상(損傷), 민족사의 굴절(屈折)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특히 북녘땅에 두고 온 혈육과 친지, 고향산천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으로 한맺힌 삶을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극단적 독재주의 폐쇄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채, 기본적인 의

식주 문제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북한동포들의 생활상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통일이 우리에게 더더욱 절실한 까닭은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항구적인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주는 첩경(捷徑)이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이 군사·외교적인 경쟁과 체제수호 등을 위해 소모해야 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분단비용’은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 왔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남북의 민족역량(民族力量)을 생산과 건설에 한데 모은다면 통일조국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더욱 큰 역할(役割)을 담당하게 되고,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열게 될 것이 틀림없다.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국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일이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나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뿌리를 두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 다시 말해서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국가는 단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이 아직도 구시대적 대남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 하나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통일에 앞서 민족사회의 통합을 먼저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통일에의 접근방법인 것이다.

즉 먼저 남북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며, 이같은 민족공동체 형성은 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 우리 통일정책의 일관성

분단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통일정책과 방안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비록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기는 했어도 내용에 있어서는 점차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완성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통일정책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본방향이 있

다. 첫째,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통일, 둘째, 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셋째, 민주적 절차로서의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 넷째, 민족의 희생이 없는 평화적 통일, 다섯째, 민족의 자존과 독립이 보장되는 자주적 통일을 추구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의 과정을 남과 북이 함께 책임있게 관리하고, 통일의 결실도 민족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려야 한다는 인식(認識)과 철학(哲學)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함께 이루는 통일’이며, ‘더불어 잘사는 통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이 점진적·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남과 북 어느 한쪽의 희생이나 패배를 전제로 하는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은 오히려 분단상태에서보다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과 북이 오랜 불신과 적대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며,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해 이질화(異質化)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아닐 수 없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영삼 대통령은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그동안 기존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내용보다 과정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일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未來像)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존 통일방안의 기본 골격을 현실에 맞게 살리면서 최근의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 (가)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시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우선 우리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위에서 서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통일로 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



우리는 한핏줄 한민족 :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후 작별을 아쉬워하는 현정화-리분희 선수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는 20세기를 지배해 온 양대 이데올로기의 실험적 경쟁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난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로서 “남북한 사이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단지 남북관계의 현실만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큰 흐름을 반영한 자신감(自信感)의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제시된 ‘민족공동체’는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이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할 수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 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족공동체 정신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

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민족 통일을 통해 국가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개념은 통일을 특정집단 또는 계급의 문제로 보거나,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 연방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통일에의 접근방식이다.

#### (나) 통일의 원칙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함으로써 과거 통일방안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주〉의 원칙: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의 원칙: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평화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민주〉의 원칙: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한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의 원칙에 수용되고 있다.

즉 통일은 반드시 민족구성원 전체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이어야 하는 것이다.

#### (다) 통일의 과정

통일의 과정은 하나의 민족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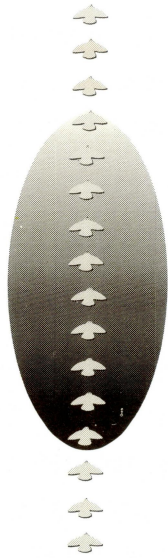
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남과 북이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 ▲ 화해·협력단계

화해·협력단계는 남과 북이 냉전 시대의 산물(産物)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우리쌀을 싣고 북녘땅으로 떠나는 수송선(1995. 6. 28. 마산항)



대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서로를 파괴·전복하거나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약속을 지켜가면서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 남북연합단계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신뢰를 토대로 통합과정을 관리하는 단계로서, 남북간에 평화를 제도화(制度化)하고 민족의 동질화(同質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남과 북은 이 단계에서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또 남북연합에 공동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들 공동기구에서 국가통합, 즉 정치와 제도의 통합(統合)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정상회의나 각료회의를 열어 동질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거나, 남북의 의회대표들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 ▲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 단계는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 합의·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국가 수립이 곧 통일의 완결(完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

루었다고 해도 분단시대의 잔재로 인해 여러가지 후유증(後遺症)이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정부 수립 후에도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상

오늘의 세계조류는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문호를 개방하여 화해·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어떤 특정 이념이나 군사력보다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국가경쟁력이다.

지금은 공허한 이념의 대결에서 벗어나 민족복리의 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과제로 삼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루 빨리 남과 북은 민족의 공동발전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슬기를 한데 모아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대한 구상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지원의 용의를 밝힌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세기에 걸친 대결의 분단사를 종결짓고, 화해·협력의 새시대를 열어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남과 북은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실현을 통해 민족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남	한	북	한
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청립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중심)		주체사상(계급중심)	
통일과정	화해협력 ▶ 남북연합 ▶ 1민족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 ※ 민족사회건설 우선(민족통일 ▶ 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 국가체제조립 우선(국가통일 ▶ 민족통일)	
과도체제	남북연합		없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없음	

## 북한의 통일전략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체 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전한반도 적화’를 위한 대남혁명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통일과 관련한 북한의 제의와 주장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선(先) 남조선혁명, 후(後) 조국통일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60년 8월 김일성 연설을 통해 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그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방제에 대한 의미부여를 각기 달리해 왔다.

즉 최초에는 연방제가 ‘과도적 통일형태’라고 하더니, 1980년 10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부터는 연방제가 ‘통일의 완결형태’라고 주장했다가, 또다시 1991년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서 ‘연방제 통일의 점차적 완성’을 주장하는 등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는 북한의 대남통일공세가 수 세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 (가) 「연방제」 통일론의 내용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①선결조건, ②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③연방정부 10대 시정방침이라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결조건’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남한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이 합법화되어야 하며, 남한정부가 용공정권(容共政權)으로 대체되고, 북한과 미국간에 평화협정(平和協定)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결조건’은 우리의 체제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방으로서의 실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리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러한 ‘선결조건’과는 이율배반적인 연방제 실시원칙과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

다. 즉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남과 북이 동등하게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각자 지역자치제(地域自治制)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연방국가의 기구로서는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기구들이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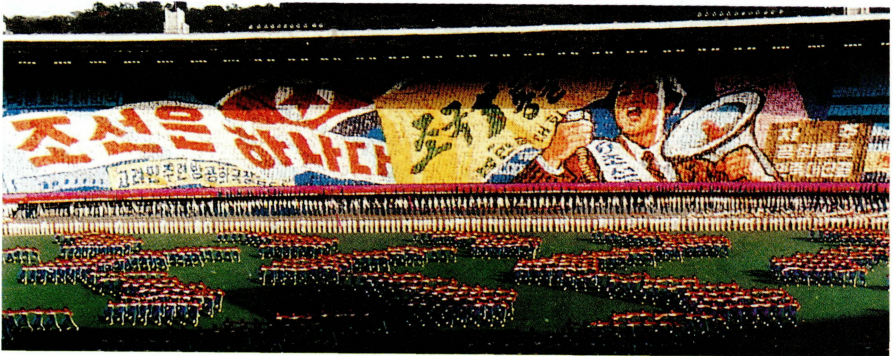
또한 북한은 연방제 실현 이후에 시행할 정책방향으로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모든 영역에서 자주정책의 실

시, 남북간 경제합작과 교류의 실시, 민족대단결과 평화애호적 대외정책의 실시 등이다.

#### (나) 「연방제」 통일론의 문제점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문제점은 먼저 협상의 상대방인 우리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방제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하며, 사실상 남과 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에 의한 통일의 모색(摸索)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전제조건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이념과 제도가 다른 두체제간의 연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역사적 선례(先例)가



북한의 통일전략을 선전하는 구호들(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1995. 10. 10)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을 보면 연방구성국가간에 정치이념과 사회제도가 같고, 평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민족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에서 남북 상호간에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없이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와 전통 속에서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단일민족인 우리가 연방제를 실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또한 통일된 뒤에 교류·협력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10대 시정방침'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실현하여야 할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연방제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평화공존의 측면을 부각시켜 내외여론을 현혹시키고, 우리 사회의 감상적 통일논의를 부추기는 데 있으며, 남조선혁

명 후 공산화 통일이라는 기본노선에서 나온 것이다.

#### (다) 「연방제」 통일론의 변화 전망

최근 북한의 통일전략은 남북공존을 표방하여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경계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체제유지(體制維持)를 보장받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린 북한의 위기상황이 통일전략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수세적·방어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한을 혁명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잠정적인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2제도 2정부'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공존노선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론은 원천적으로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이라는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고려할 때 연방제 통일론의 진정한 변화는 북한이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 3.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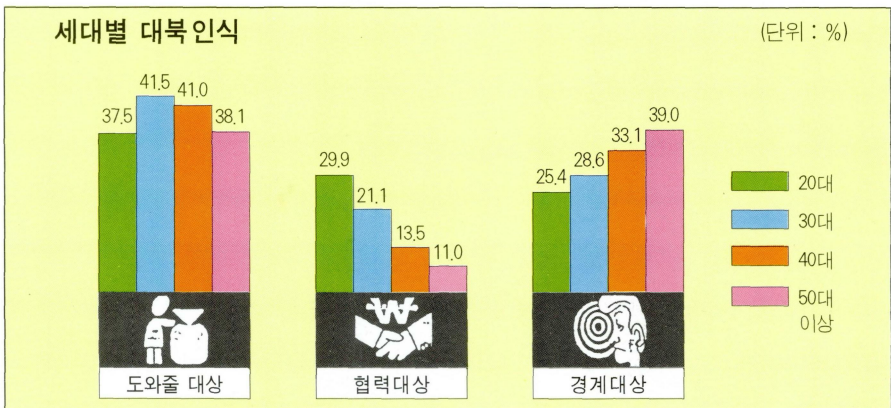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는 북한체제를 보는 두개의 상반된 시각이 공존(共存)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을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북한의 체제와 실상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려는 입장으로서,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추구와 최근의 핵개발 의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

이는 입장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가급적 많은 양보와 지원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극단적 입장에만 치우쳐 북한을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은 엄연히 우리의 안보(安保)를 위협하는 대상이면서도 우리와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근래 우리 국민들의 북한관(北韓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8년의 「7·7선언」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대결적인 시각에서 보다는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출처: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면한 총체적 위기를 넘기기 위해 때때로 유화적인 전술적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간에 신뢰분위기가 조성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이같은 이중적 태도를 분별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노력은 계속해 나가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지나치게 감상적으로만 보아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의 냉전적인 대결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되는 이유는 바로 남북관계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 오늘의 북한

통일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 북한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가 일거에 몰락하는 세계사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북한은 지금도 소련을 비롯한 동구공산권의 붕괴가 ‘주체사상’과 같은 훌륭한 사상과 김일성부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로서 ‘필승불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가운데 어떠한 시련(試鍊)이 닥쳐 오더라도 물러서거나 주저함 없이 이를 끝까지 지켜나아가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이른바 ‘체제신념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최근 몇년 사이에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모순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오늘날 그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지배되는 일당독재체제(一黨獨裁體制)라는 점이다. 북한의 모든 국가권력은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을 비롯한 다른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노동당의 외곽 조직에 불과하다.

둘째, 수령의 1인 지배체제가 철저히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당의 최고영도자’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영도의 유일중심’이라고 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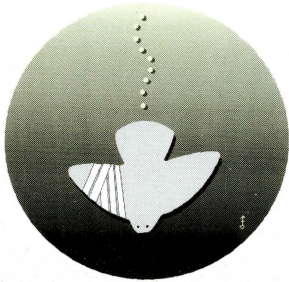
셋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부자세습체제(父子世襲體制)라는 점이다. 이미 북한에서는 1970년대 들어 ‘대(代)를 이은 혁명’과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제기하여 공개리에 김정일예로의 권력승계를 준비해 왔으며, 이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서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런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은 가중되고 있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속에서 정권탄생 이후 최초로 ‘권력승계’라는 정치적 난제(難題)를 해결해야 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김정일 우상화를 위해 ‘정일봉’으로 바뀐 백두산 ‘장군봉’

한편 북한의 경제는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체제는 그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비능률로 인해 근로의욕과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과중한 군사비와 공산권 붕괴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악화는 북한의 경제를 만성적인 침체상태로 빠뜨렸다.



그 결과 북한경제는 1990년 이후 최근 5년동안 연평균 4%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1993년 12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을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는 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잃어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은 원래 예견한 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은 오늘날의 북한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경공업제일주의, 농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가치를 새로이 내걸고 제한적이거나 경제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하지 않는 한 북한경제가 회생할 전망은 어둡다고 하겠다.

이러한 체제모순과 심각한 경제난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당간부 및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북한사회의 병리현상을 촉진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식량배급, 직장배치 등

에서 평양시민과 당관료를 우대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억압과 통제속에 혈벗고 굶주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먹을 것과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통제와 강압으로 정권을 지탱하고 있으나,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 위

기속에서 출발하게 될 김정일 정권은 개방과 개혁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폐쇄와 고립 속에서 파국을 맞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岐路)에 서 있다고 하겠다.

### 대남정책의 이중성

안팎으로 밀려오는 이같은 도전 앞에서 북한은 이중적인 대남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992년 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국제적십자사로부터 배급받은 식량을 간이수레로 실어 나르고 있는 북한주민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시켰다.

또한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1991년 12월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데 이어 1992년 4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조항을 마련한 뒤 그해 10월에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기업법’ 등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국제환경에 대처하려는 생존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위기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NPT 탈퇴선언 등 핵개발 위협을 통해 주변국가들을 긴장시켰고,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발표와 ‘대민족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등 남한의 정당·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통일전선을 강화하였다.

이는 북한이 아직도 통일문제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려 하지 않고 이른바,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한 대남혁명

전략과 통일전선전술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다. 속도와 폭이 문제이지는 하나 북한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날로 더해가는 경제난과 주민들의 팽배한 불만 때문에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협력(協力)의 손길을 내밀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남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남한의 쌀 15만톤 무상제공과 한국형 경수로 제공을 수용하는 등 실리를 추구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알수 있다.

## 4. 통일환경은 어떠한가

### 화해·협력의 새시대

21세기를 눈 앞에 둔 오늘의 세계는 근본부터 흔들리는 격동과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와 번영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이념과 체제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지난날 적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지금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고, 분단을 강요받았던 민족들은 통일을 성취하였다.

개혁과 개방으로 거듭난 구사회

주의 국가들의 변화와 통일을 이루어 새 역사를 열어 가고 있는 독일이 이 시대의 격변을 잘 말해주고 있다. 비록 체첸사태 등 지역분쟁의 지속과 중국·프랑스의 핵실험, 구사회주의권에서의 좌파정당 득세 등 불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유럽과 북미대륙 등 세계 곳곳에서는 보다 큰 공동의 번영을 위해 국가단위를 넘어서는 지역통합(地域統合)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 분단과 대립을 강요했던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화해·협력의 새기운이 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조류는 비록 그 자체가 우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의 APEC 정상회의

리 민족의 통일을 당장에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도(前途)에 밝은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

오늘의 시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세계문명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역사를 주도해 온 세력은 유럽과 북미의 두 대륙이었지만,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총생산의 약60%와 무역 총액의 약40%를 점유하고 있는 이 지역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각료회의 형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3년 시애틀 회의를 계기로 APEC 정상회의가 추가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1994

년 ‘보고르선언’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고, 1995년 APEC 정상 회의에서는 ‘오사카선언’을 통해 보고르선언의 무역·투자 자유화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자유화 진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태지역 내에서도 동아시아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첨예(尖銳)한 냉전의 각축장이었던 이 지역에서 이른바 ‘4마리 용’의 성공에 이어 지금은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의 움직임은 이 지역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지역 국가 사이의 경제협력(經濟協力)과



집단적 안보협력(安保協力)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 주변 4국의 한반도 정책

탈냉전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특징은 각국이 자국의 실리(實利)를 극대화하는 대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의 주변 4국들도 한반도가 특정국가의 영향력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면서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등 지역불안정이 야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데에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한·미 쌍무동맹체제와 전진 배치전략을 근간으로 한반도에서의 분쟁발발을 억지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 정책과 핵우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군사적 모험을 억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변화(變化)’를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동북아의 그것에도 필수적이며 북한이 남한에 위협세력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도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 현상유지 차원에서 남북간의 대화와 평



통일문제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풀어가야...

화공존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북한 일변도 정책을 한반도 균형정책으로 바꾸면서 국내정치 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화로운 주변환경이 요구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1992년 1월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제2의 경제건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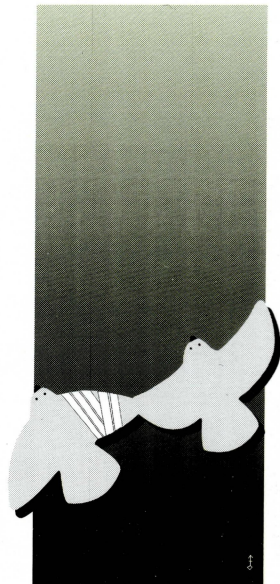
중국도 경제건설의 추진을 위해서는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냉전 이후 주변 4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 차원에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가들

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는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상황진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반도의 주변환경은 아직도 ‘화해(和解)와 긴장(緊張)’이라는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우리는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민족통일의 호기’로 삼아야 하겠다.



## 5.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통일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민족적 합의

이제 통일의 외적 장애는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의지와 역량이 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시대가 열린 만큼, 지금부터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독일통일은 준비없이 맞는 통일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後遺症)을 낳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

다. 우리는 착실한 준비없이 통일만을 바라는 일이나, 통일의 성취 그 자체만을 원하는 '무조건적 통일론'과 '감상적 통일론'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 통일은 질서있고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통일과정 못지않게 우리 모두가 중시해야 할 것은 통일조국의 모습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조국은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나라이어야 함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가장 바람직한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희망찬 통일조국

과정은 남북이 이러한 통일의 목표와 미래상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함께 변화·발전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일이다.

우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는 북한이 변해야 할 차례다. 북한이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변화해 갈 때 통일의 날은 그만큼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 통일은 나의 일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내적 통일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발전, 경제번영, 사회정의, 국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물질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통일기반의 확립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주민들에게 인간의 참다운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나아가 평화통일에 동참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가

능했던 주된 요인중의 하나는 서독 사회의 모습이 동독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데에 있었다.

지금 우리가 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우리 사회를 '모범적인 민주공동체(民主共同體)'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통일과업은 민족전체의 문제일 뿐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룬 후 늦어도 2020년이 되면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한 「21세기위원회」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 국가 건설은 민족의 번영(繁榮)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남과 북의 형제들이 대륙간 고속열차를 타고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북경으로, 모스크바로, 세계로 함께 달리는 것, 이 얼마나 가슴벅찬